

지구온난화 가속화...산불 잦아지고 대형화

산림청, '봄철 동시다발 산불백서' 발간...30년간 기온 1.4℃ 상승 봄·여름 고온건조 심화, 겨울 강수량 적어 산불 가능성↑...대책 시급

가속화하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봄철 및 여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겨울철에는 적은 강수량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산불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최근 지난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천·함평 등 11개 지역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응과정 및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산불'이라는 소재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불발생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산불 발생 예측 내용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기상청의 통계연보와 산림청의 산불통계대장을 활용해 산불 발생 및 피해 면적의 시계열적 변화를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영향을 분석했다.

최근 30년 우리나라 기온은 20세기초(1912-2017)보다 1.4도씨 상승했고, 최근 3년의 겨울철 강수량은 107.5mm였다. 지난 2021년 겨울철 강수량은 13.3mm로 기상관측이후 역대 최저 겨울철

강수량을 기록했다.

2020년대(20-23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8369ha로 2010년대 857ha보다 약 10배 증가했고, 연간 산불 발생일수도 2000년대 136일, 2010년대 142일, 2020년대 16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분석됐다.

최근 5년 산불대응 1단계의 기준인 5ha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비해 2배 가까이 증가(8.6→15.6건)했으며 100ha이상의 대형 산불 발생 또한 2010년대 이후 증가(13→21건)했다.

결국 산림 내 연료 축적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및 확산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 산불이 점차 중·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 중 2월은 건조함이 평년대비 6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3월은 우리나라 주변의 고기압 영향으로 강한 햇볕과 따뜻한 바람 유입으로 기온이 평년 보다 3.3℃ 높았다.

2월부터 4월까지의 강수량은 매우 적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가뭄에 시달렸다. 결국 이 기간 순천과 함평을 포함한 전국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백서를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를 적용해 미래 산불위험지수, 산불 위험도의 변화를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기후

변화시나리오(HAPPI)를 통해 기온이 1.5℃ 혹은 2.0℃ 상승 시 산불 위험지수는 최소8.6%, 최대 1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인류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6차 보고서에서 사용된 SSP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중미래(2040-2070년)는 30-100%, 21세기 말(2071-2100년)은 47-158%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5차 보고서에서 사용된 RCP 시나리오도 중미래(2040-2070년)는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은 16-9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험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단계별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지역별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 3일 낮 12시 20분께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인근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내려졌고 헬기 11대와 진화인력 1177명, 진화장비 574대가 동원돼 682ha를 태우고 농업·축사시설 4건, 농기계 12대, 가축·꿀벌 농가 2개소에 피해를 입히고 나서야 다음 날 오후 6시께 진화됐다.

피해 금액은 22억 6200만원, 복구 금액은 40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오후 1시께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한 남동풍을 타고 산불은 빠르게 번졌다. 불은 26시간만에 진화됐으며 188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1%파티 워크' 광주서 열려요

'지속가능한 의생활' 캠페인, 27일 한걸음가게 옷 바꿔입기, 재봉틀·릴레이 직조 체험 등 다채



지난해 열린 '21%파티 워크' 행사 모습.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옷은 1500억 벌 이상으로 이중 73%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옷의 환경 파괴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에 처음 시작된 '전 국민 옷 바꿔입기' 운동이 눈길을 끈다.

'21%파티 워크'는 사 놓고 입지 않는 말짱한 옷을 바꿔 입고 나누어 입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환경 캠페인이다. 자신의 옷 중 안 입는 옷의 평균 비율 21%, 즉, 5벌 중 1벌은 입지 않는다는 다시입다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가져온 행사명이다.

지난해 제주도와 부산, 광주, 춘천을 비롯한 전국에 총 21곳에서 열렸던 '21%파티 워크'가 올해도 광주에서 개최된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지원으로 다시입다연구소와 광주 한걸음가게가 함께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캠페인 '너와 나의 공유 옷장, 21%파티'가 오는 27일 오후(12시-2시 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걸음가게(광주 동구 충장로 45-2, 2층)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가게와 봉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의류 교환파티는 가져온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옷으로 교환하는 행사다. 참가자는 지금 입기 좋은 간헐기 또는 여름 의류 3벌(남방, 티셔츠 등 상의류, 치마, 원피스, 바지 등과 모자, 가방 등 패션잡화)을 가져 오면 된다. 세탁 안된 옷이나 구김이 심한 옷, 얼룩이 묻은 옷 등은 받지 않는다. 회차 당 20명씩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해야 한다.

솔로 워크숍도 함께 진행된다. '드러룩 재봉틀 체험'(현장 신청)은 낯설었던 재봉틀과 친해지는 시간이다. 간단한 선프수선을 배우고,

교환 인종라벨을 직접 달아본다.

더이상 입기 어려운 티셔츠로 만든 실을 활용한 티셔츠 안 체험도 있다. 티셔츠안을 활용해서 간단한 직조 기법을 배우고 함께 한 줄 한 줄 쌓아올려 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매트 직조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10분 단위로 진행된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품은 참여자 이름과 함께 한걸음 가게에 전시된다. 개인 체험에서는 티코스터를 만들어본다. (참가비 5000원)

한뼘클럽의 '구명난 양말' (50벌)은 해진 양말을 합하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직조 수선법을 배워 각자의 양말을 꿰매보는 것으로 수선하고 싶은 양말을 가져오면 된다. 낮12시, 오후 1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참가비 5000원(재료비 및 노쇼 방지)

신청: bit.ly/exchange_day. 문의 한걸음가게 010-5318-036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구명난 양말 수선

남구, 6월부터 1인가구에 '호신용품·밀키트' 지원

광주시 남구가 오는 6월부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과 밀키트를 지원한다.

남구는 1인 가구에 호신용품과 밀키트를 제공하는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을 느끼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8세 이상 1인 여성 가구에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을 제공한다.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과 안전을 위한 택배 송장 지우개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1인 가구의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개선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1인 가구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애인 이동권 보장·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의날 맞아 6개 정책요구안 제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6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핵심 정책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개정,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행 버스 대수의 2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38%로 이에 훨씬 미친다는 것이 장차연의 설명이다.

대체수단인 특별교통수단(새빛콜) 또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전용차량은 127대에 불과해, 장애인들은 새빛콜을 이용하기 위해선 평균 17분, 최대 3시간 15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차연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은 차량 운전원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광주시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해 올해부터 4년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 주기별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호소이다.

장차연은 광주 지역 2만 700여명의 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단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광주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고령화 대책으로서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장애인·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